

최근 건설정책 소고와 바람직한 발전 방안

- 건설산업 육성·진흥 정책의 현황 및 과제 -

| 2024. 12. 09.(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홍성진 산업정책연구실장



INDEX

1. 최근 건설정책 동향
2. 최근 건설정책 집행 환경
3. 주요 건설산업 육성·진흥 정책 검토
4. 시사점 및 정책 제언



건설산업 육성·진흥
정책의 현황 및 과제

1 최근 건설정책 동향



1. 최근 건설정책 동향

정책 내용 및 기대 효과

※ 최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건설경기 지원, 부동산 PF 제도개선 등 총괄적 대응 방안 제시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4.1),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24.3),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24.11) 등 연계 정책 발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활력 회복"

도심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① 사업속도: 패스트트랙 도입 ② 진입문턱: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③ 사업성: 초기 자금지원, 재건축부담금 추가 합리화 ④ 중단 없는 사업: 공사비 갈등 완화
	1기 신도시 재정비	① 신속하고 내실 있는 계획 수립 ②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여건 획기적 개선 ③ 공공의 역할은 충실히, 차질 없이 이행
	소규모정비·도심복합사업	① 진입문턱: 사업 가능 지역 확대 ② 사업속도: 절차 간소화 및 참여유인 제고 ③ 사업성: 인센티브 및 자금지원 강화 ④ 광역 정비: 미니 뉴타운 지원 확대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공급 여건 개선	① 도시건축규제 완화 ② 세제·금융지원
	활용도 제고	① 구입 부담 경감 ② 등록임대 사업 여건 개선 ③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④ 신축매입약정 확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① 보증금 피해 경감 지원 ② 피해자 주거 지원 강화 ③ 종합 지원체계 강화 ④ 철저한 전세사기 예방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공공주택 공급 확대	① '24년 공공주택 14만호+α 공급 ② 공공주택 민간 참여 확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① 물량 확대: 신규택지 2만호, 수도권 신도시 3만호 ② 신도시 조성속도 제고
건설경기 활력 회복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	① PF대출 지원 ② 유동성 지원
	공공자원을 통한 민간 예외 해소	① 지방 사업여건 개선 ② 공공임대 참여자분 초기 매각
	사업장별 갈등 해소 지원	① 공적 조정위원회 ② 민간 사업장 공공 인수 ③ 정상화 펀드
	건설사업 관련 리스크 완화	① 공사 재개 지원 ② 수분양자 보호 ③ 열려업제 보호
	건설투자 활성화	① 재정 조기집행 ② 민자사업 확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건설경기 회복 지원

전략		세부 추진과제
적정 공사비 반영	공공 공사	① 건설공사 단가 현실화 ② 물가 상승분 적정 반영
	민간 공사	① 신탁방식 활성화 및 전문가 선제 파견(정비사업) ② 분쟁조정위원회 신속 조정
대형공사 지원 최소화	기술형 입찰	① 입찰제도 합리화 (불공정 관행 개선 등) ② 입찰제도 유연화 (설계변경 경직성 완화 등)
	민관 합동 PF 사업	① 사전 컨설팅 등 조정안 수용 지원 ② 조정률 상설화·법제화 등 조정기능 강화
민간으로 해소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① LH, 리즈가 PF 부실 우려 사업장 인수 ② 리즈 활용한 지방 미분양 매입
	유동성 지원	① PF 보증요건 완화 ② 비주택 PF 보증 신설
	규제개선·부담경감	① 주택공급(3기 신도시) 조기화 ② 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③ 국가계약 한시특례 연장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자기자본비율(20%)을 유도하는 등 부동산 PF 산업 구조 선진화

시장 변동 리스크 최소화, 투자 활성화 도모

안정적인 수준의 자기자본 확충 기반 마련

- 현물출자를 통한 안정적 사업구조 마련
- 인센티브 등을 통한 자본 확충 지원
-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자본 확충 유도
- 금융 건전성 규제체계 합리화

부동산 PF 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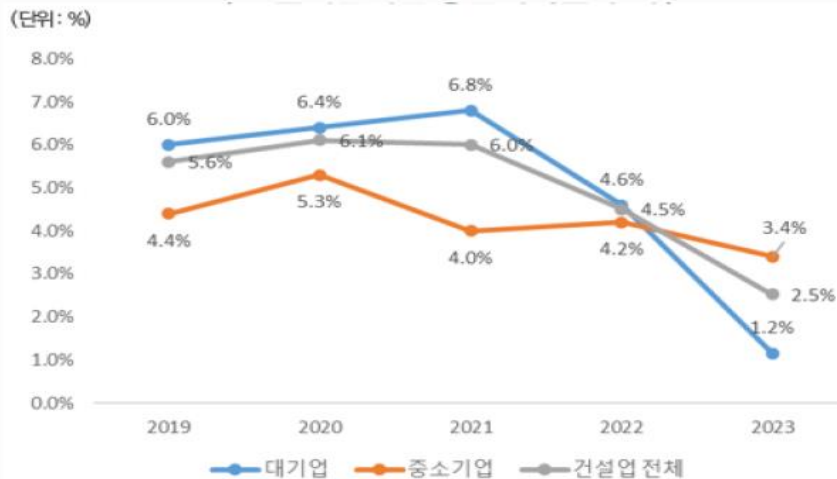
- PF 대출시 사업성 평가 강화
- 책임준공, 수수료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내실화

역량있는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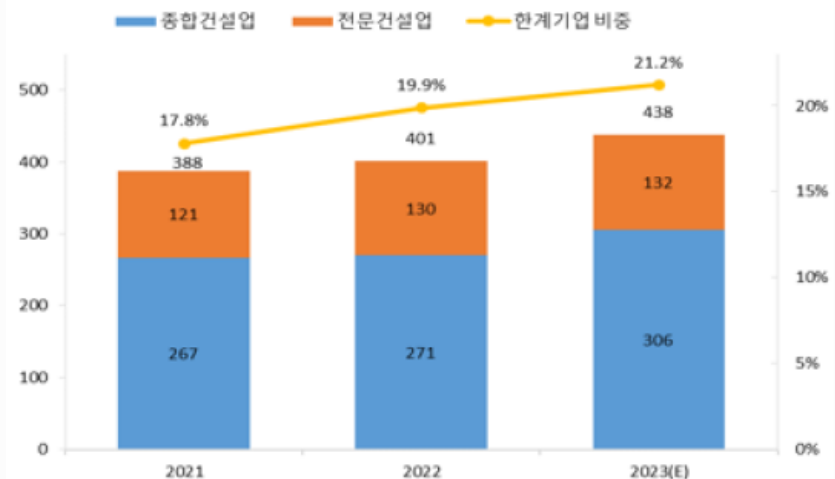
- 리즈를 통한 개발·운영 전문 디벨로퍼 육성
-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참여 활성화
- 우수 디벨로퍼 인증체계 마련

- ❧ 또한, 범정부 차원의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스마트건설기술, 외국인근로자, 계약제도, 중소건설업 육성·지원 등 분야별 대응 방안 제시
- ❧ 건설기업의 수익성 지표 악화, 건설업 폐업 및 한계기업 증가 추세에서 양적·질적 측면의 건설업 지원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긍정적 시그널(signal) 효과
 - 건설기업 이익률은 2021년 이후 감소 추세이며, 202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대에 불과
 - 건설기업 부도 및 폐업 증가 등으로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부실에 대한 우려 점증

건설외감기업 영업이익률 추이



건설업 한계기업 비중 추이





건설산업 육성·진흥
정책의 현황 및 과제

2

최근 건설정책 집행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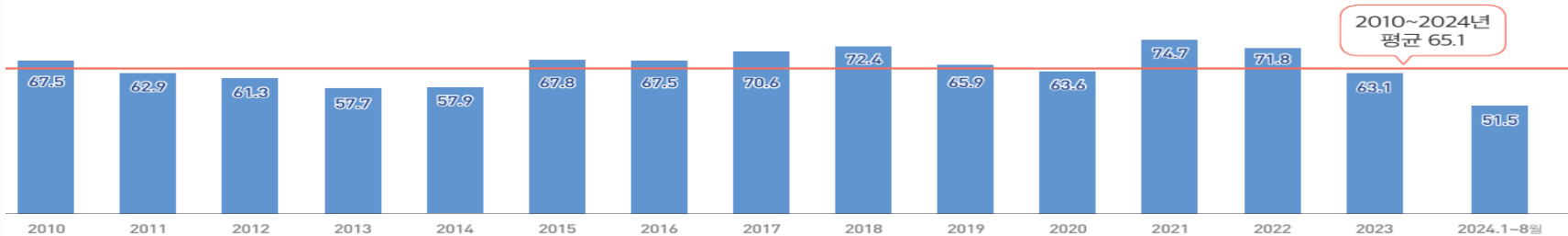
2. 최근 건설정책 집행 환경

정책 파급력

❖ 건설경기 심리가 꺾인 상황에서 건설 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다소 미흡한 상황

- 건설경기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대표 심리지수인 건설업 경기실사지수(BSI)는 올해 51.5에 불과(역대 최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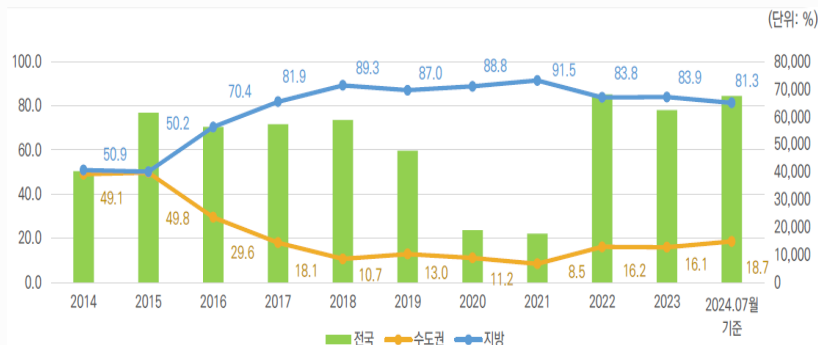
건설업 경기실사지수(BSI) 추이



자료: 박선구(2024), 2025년 건설경기 전망,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정책·사회·경제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건설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지방 미분양 증가 추이



건설 리스크 요인



※ 건설경기 회복 또는 적응을 위해서는 정치(精緻)한 건설산업 육성·진흥 정책 필요

- 새로운 정책 발굴보다는 기존 정책과 연계하여 수정·보완하는 대응 방향

※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스마트건설기술, 외국인근로자, 계약제도, 중소건설업 육성·지원의 건설산업 육성·진흥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파급력 제고 및 연계 방향 제시

건설산업 육성·진흥 정책 검토 대상

구분		세부 내용	관련 법규
총괄적 대응 방안	주택공급 확대	• 재건축·재개발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소규모 정비·도심복합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공공주택 공급 확대	• 공공주택 특별법
	건설경기 지원	• 적정 공사비	• 건설산업기본법
		• 입찰제도	• 국가 및 지방계약법
		• PF 유동성 지원	• HUG 내규
	부동산 PF	•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자본 확충 유도	• 은행법 등 감독규정 - 업권별 감독규정세칙
		• PF 대출시 사업성 평가 의무화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책임준공 합리화	• 향후 제도 개선('25.1분기) - 책임준공개선 TF
단위적 대응 방안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 하도급대금 체불 피해 방지	• 건설산업기본법
	스마트건설기술	• 스마트 건설기술 실증 지원사업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	• 숙련기능인력 도입 기반 조성	• 건설기술진흥법
	계약제도	• 발주기관의 단가 산출내역 공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중소건설업 육성·지원	•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등	•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 건설산업기본법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건설산업 육성·진흥
정책의 현황 및 과제

3

주요 건설산업 육성·진흥 정책 검토



- ※ 2024. 01. 10.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사업 관련 리스크 완화’ 방안 발표
- ※ 건설사업 리스크(구조조정 등)에 따른 공사지연, 수분양자·협력업체 피해의 최소화, 특히 상대적 약자 보호의 효과 기대

건설사업 관련 리스크 완화 방안 주요 내용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활력 회복”

도심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① 사업속도: 패스트트랙 도입 ② 진입문턱: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③ 사업성: 초기 자금지원, 재건축부담금 추가 합리화 ④ 중단 없는 사업: 공사비 갈등 완화
	1기 신도시 재정비	① 신속하고 내실 있는 계획 수립 ②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여건 획기적 개선 ③ 공공의 역할은 충실히, 차질 없이 이행
	소규모정비·도심복합사업	① 진입문턱: 사업 가능 지역 확대 ② 사업속도: 절차 간소화 및 참여유인 제고 ③ 사업성: 인센티브 및 자금지원 강화 ④ 광역 정비: 미니 뉴타운 지원 확대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공급 여건 개선	① 도시·건축규제 완화 ② 세제·금융지원
	활용도 제고	① 구입 부담 경감 ② 등록임대 사업 여건 개선 ③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④ 신축매입약정 확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① 보증금 피해 경감 지원 ② 피해자 주거 지원 강화 ③ 종합 지원체계 강화 ④ 철저한 전세사기 예방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공공주택 공급 확대	① '24년 공공주택 14만호+α 공급 ② 공공주택 민간 참여 확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① 물량 확대: 신규택지 2만호, 수도권 신도시 3만호 ② 신도시 조성속도 제고
건설경기 활력 회복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	① PF대출 지원 ② 유동성 지원
	공공자원을 통한 민간 애로 해소	① 지방 사업여건 개선 ② 공공임대 참여자분 초기 매각
	사업장별 갈등 해소 지원	① 공적 조정위원회 ② 민간 사업장 공공 인수 ③ 정상화 펀드
	건설사업 관련 리스크 완화	① 공사 재개 지원 ② 수분양자 보호 ③ 협력업체 보호
	건설투자 활성화	① 재정 조기집행 ② 민자사업 확대

4 건설사업 관련 리스크 완화

- (공사 재개) 구조조정 등으로 공사 중단시 신속 재개, 공기지연 최소화
- 기존 시공사의 계속 공사를 유도하되, 대체 시공사 선정이 필요할 경우 대체 시공사 풀(건설협회) 마련 등 원활한 시공사 교체 지원
- (수분양자) 입주 지연, 하자보수 우려 등 수분양자의 애로 해소
- 주택 사업장이 신속하게 정상화(시공사 교체 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분양대금을 전액 환급하여 입주예정자 보호
 - * 분양대금 환급 1개월 전 필요절차에 대한 사전안내 강화(책자, 동영상 등)
 - 구조조정 등 발생 시 입주예정자 불안 해소를 위해 사업진행 상황 및 향후 절차 등을 전체 수분양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알림톡)
 - 준공 사업장 등은 하자보수 주체 공백 방지를 위해 LH, HUG가 수분양자 불편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보완조치 이행
- (협력업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통해 하도급대금 체불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 차질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확대
- 대금 지급 차질 발생시, 공공은 신속하게 직불계로 전환하고, 민간은 발주자에게 협력업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권고
 - 원도급사의 구조조정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 프로그램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증 미가입, 대금체불 건설사에 대해 행정처분

⇒ 건설사업 리스크(구조조정 등)에 따른 공사지연, 수분양자·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기 사업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신속대응반 운영중 '24.1.1~)

* 수분양자·협력업체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애로신고센터도 운영('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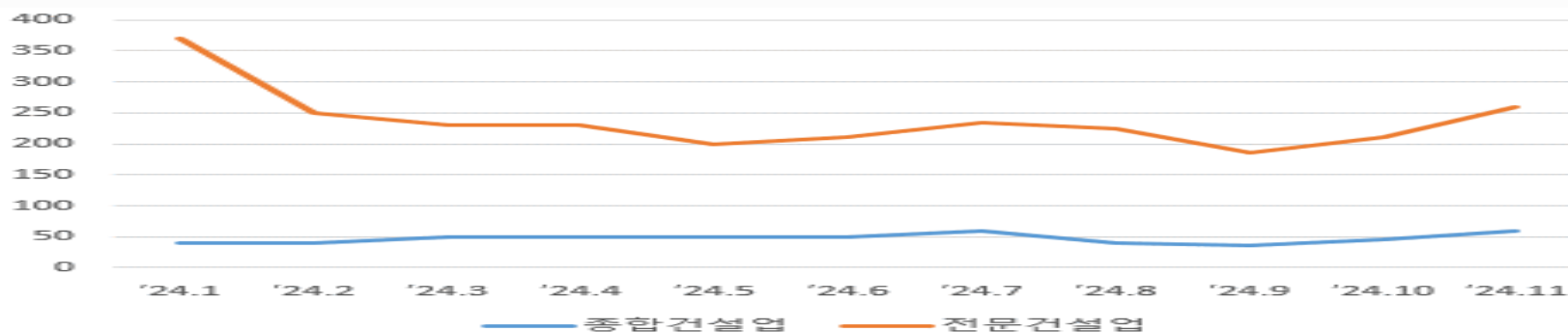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이후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24.3),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24.11) 등 연계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방안은 미발표

- 공사비 분쟁 예방 및 신속 조정, LH 부실우려 사업장 매입, 지방 미분양 매입을 위한 CR리츠 세제지원, 준공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할인 폐지 등
- 자기자본비율 제고, 관련 평가제도 도입, 책임준공 관행 개선, 개발 및 운영 사업 구조 유도 등

※ 건설업 폐업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에 따른 협력업체 보호 방안이 미흡한 상황

- ’24년 11월 기준 약 3,190개(종합건설업: 약 540, 전문건설업: 약 2,650) 폐업 신고, 10월부터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건설업 폐업신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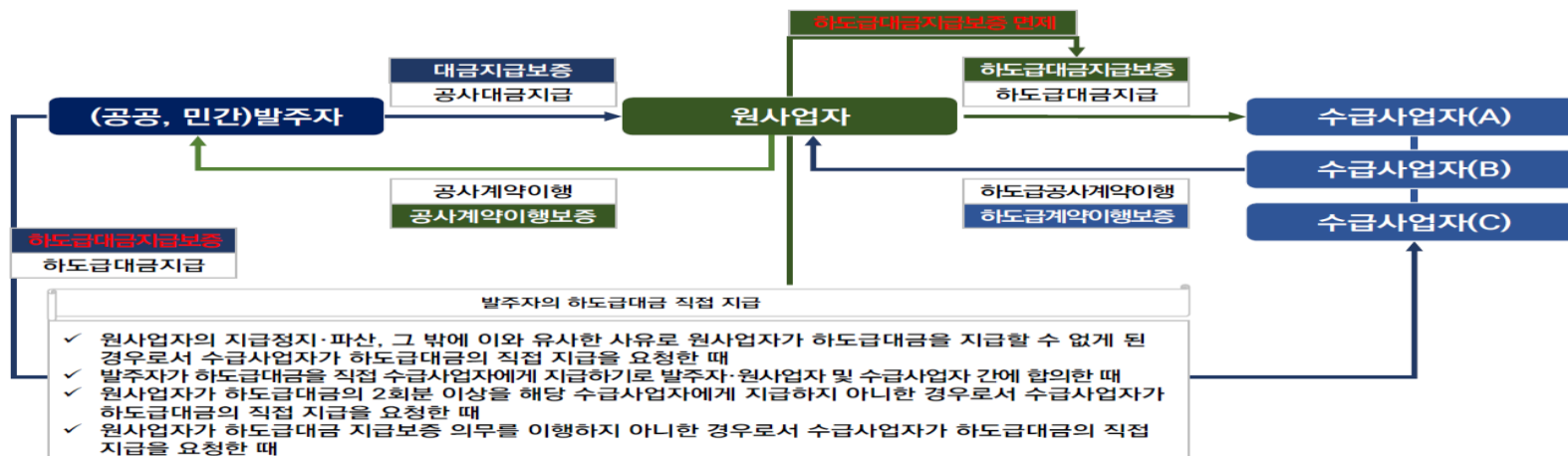


❧ 협력업체는 건설 자재·장비업자, 노동자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선 보호 방안 필요

- 협력업체(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현재 최선의 방법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로 구분
-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간 합의(직불합의) 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 민간공사 발주자의 지급능력이 부족하거나, 발주자와 수급인의 계열관계로 인한 불공정 합의 또는 동반 부실이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 체불 발생

❧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의 직불합의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필요

협력업체 보호 방안: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 공공·민간 건설사업 관련 계약자유의 원칙은 현대 복리사회에서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공공복리를 위하여 발주자의 책무 부여 필요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화’의 입법 개선 필요

계약자유 원칙 제한 원리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232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02017 판결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의 보증을 포함한다)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스마트건설기술: 정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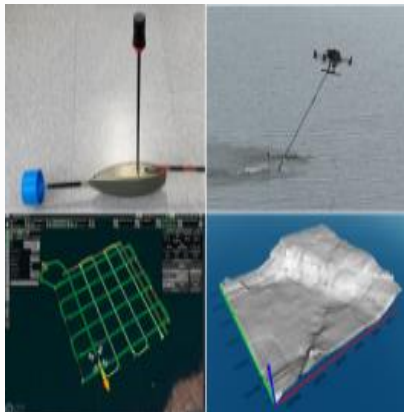
- ❖ 2024. 07. 23. 정부는 약 33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한 스마트 건설기술 실증 지원사업(10개) 발표
 -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18년),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22년),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23년) 등 스마트건설기술육성을 통한 글로벌 건설시장 선도' 비전의 실행 전략
 -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핵심 스마트건설 현장실증, 스마트건설 EXPO 등 연계 정책 발표 및 실행
- ❖ AI, 빅데이터, BIM, OSC·모듈러 등 미래 스마트건설 기술을 통한 건설현장의 생산성, 인력 수급 안정화, 안전사고 절감 등 건설산업의 진일보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효과 기대

스마트건설기술 개요

〈건설 자동화〉



〈디지털 센싱〉



〈위험시설 3D 스캐닝〉



〈스마트 워치〉



❖ 정부의 스마트건설기술 정책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기술 수요자인 발주자와 이용자인 건설기업의 니즈(needs), 원츠(wants), 여건(operations) 등 정책 목표와 건설 현장간의 괴리가 큰 상황

- 개발 중인 스마트기술은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필수적
- 다만, 인력 중심적이고 간단한 공구·장비로 이루어진 실제 현장 기술과 격차가 크고 생산방식·공정의 혁신적 변화를 수반해야 하므로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소요 필요
- 스마트건설기술에 따른 표준품셈 등 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적용으로 기존 장비의 후속적 개발 형태

스마트건설 신기술 지정 현황

연도		합계	'89~'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신청(건)		2,264	1,630	71	36	50	51	53	96	62	70	61	58	25
지정 (건)	일반	993	717	36	26	28	25	23	26	28	14	30	28	12
	스마트 건설	20	-	-	-	-	-	-	-	3	2	4	8	3

'24년 표준품셈 스마트건설 규율 내용(예시)

8-3-9 [80]스마트 건설장비

(8201) 3D GNSS 머신 가이드런스(굴삭기용) ('23년 신설)

분류 번호	규격 (mm)	내용 시간	연간표준 가동시간	상각 비율	정비 비율	연간 관리 비율	상각비 계수	정비비 계수	관리비 계수	시 간 당(10 ³) 계
8201-0100	3D GNSS MG	5,000	1,250	0.9	0.8	0.1	1,800	1,600	530	3,930

[주] 3D GNSS 머신 가이드런스의 구성품은 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드런스 디스플레이 화면 등이다.

(8202) 3D GNSS 머신 컨트롤(MC) (굴삭기용) ('24년 신설)

분류 번호	규격 (mm)	내용 시간	연간표준 가동시간	상각 비율	정비 비율	연간 관리 비율	상각비 계수	정비비 계수	관리비 계수	시 간 당(10 ³) 계
8202-0100	1.0 (3D GNSS MC)	5,000	1,250	0.9	0.8	0.1	1,800	1,600	530	3,930

[주] 3D GNSS 머신 컨트롤의 구성품은 머신 컨트롤 장치(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유압 제어 키트),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드런스 디스플레이 화면, 머신 컨트롤용 조종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한다.

(8203) 3D GNSS 머신 가이드런스(MG) (물도차용) ('24년 신설)

분류 번호	규격 (ton)	내용 시간	연간표준 가동시간	상각 비율	정비 비율	연간 관리 비율	상각비 계수	정비비 계수	관리비 계수	시 간 당(10 ³) 계
8203-0019	19 ton (3D GNSS MG)	5,000	1,250	0.9	0.8	0.1	1,800	1,600	530	3,930

[주] 3D GNSS 머신 가이드런스의 구성품은 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드런스 디스플레이 화면 등이다.

3. 주요 건설산업 육성·진흥 정책 검토

스마트건설기술: 정책 한계

❖ 국내에서 개발 중인 스마트기술은 R&D 역량을 갖춘 일부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건설생산체계에서 직접생산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의 스마트기술 접근은 한계가 큰 상황

- 스마트기술 도입기에 불가피한 높은 비용과 리스크·기술 복잡성 대비 인센티브 부족
- 대한전문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기술개발에 투자한 전문건설업체 수(B)는 전체 건설업체 수(A)의 약 1% 수준에 불과하며, 그 추이가 정체된 상황

스마트건설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현황

구분	혜택
건설기술진흥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하면 우선사용 권고, 고의·중대과실 아니면 담당자 면책 • 정책자금 우선지원 요청 가능 • 신기술 부분 하도급 공사 참여 가능 • 보호기간 지정(최초8년+연장7년) 및 기술사용료(3.5~8.5%) 징수 가능
계약, 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계약 가능 • 신기술을 포함하여 일반경쟁시, 입찰공고 전 기술사용협약 체결 • PQ평가에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평가(설계 5점, 시공 6점)
신기술활성화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시공 지원(신기술 신청하려는 기술을 발주청이 현장제공, 비용 50% 지원) • 특정공법 심의(6개 공법 중 신기술 2개 이상 상정)

전문건설업의 R&D 투자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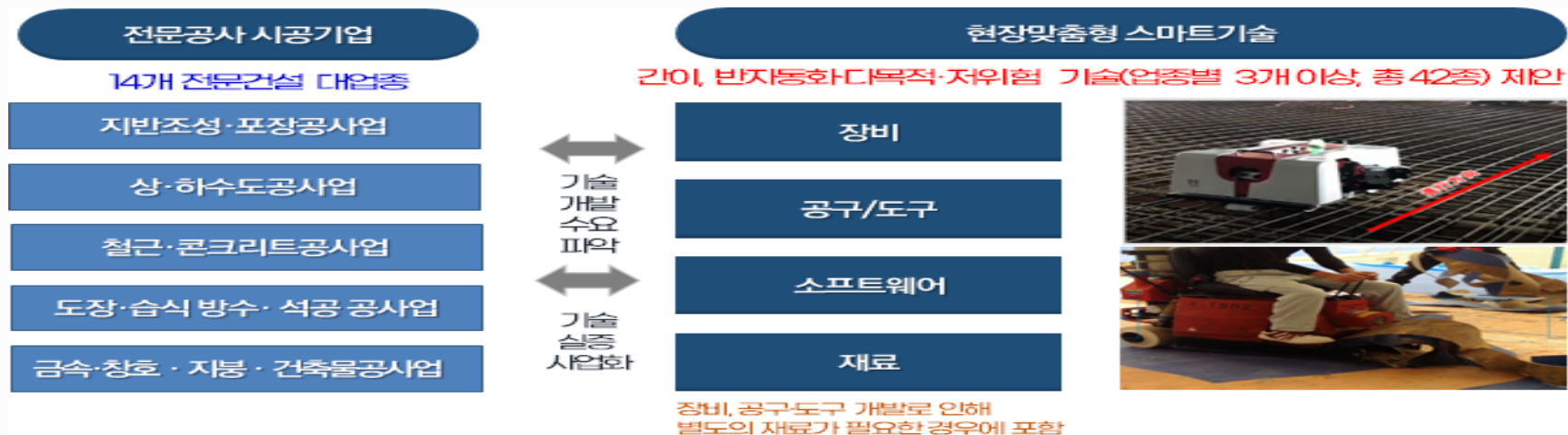
단위: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문건설업체 등록건수 (A)	47,497	56,724	52,433	54,517
기술개발 업체수 (B)	520	540	532	486
기술개발 투자비 현황 (C)	136,710,130	727,288,328	461,146,370	695,047,080
전체 전문건설업체 수 대비 기술 개발 업체수 비율 (%) (A/B*100)	1.09%	0.95%	1.01%	0.89%
전체 전문건설업체 기준 업체당 평균 투자비 (C/A*100)	2,878	12,822	8,795	12,749

❧ 기존 스마트건설기술 정책 이외에 상향식 접근 방식(Bottom Up)의 스마트건설기술 정책 수립을 통하여 정책 목표와 건설 현장간의 괴리 해소 및 스마트기술의 개발·보급·확산 필요

- Bridge 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 간극 최소화: 첨단 스마트기술 활용역량 사전 제고
- 간이·반자동화기술 등을 통한 비용 및 리스크 절감: 간이·반자동화·저위험 스마트기술의 적용성 강화
- 공중·작업 단위 기술 실행력 제고: 공중·작업 단위의 스마트기술 개발의 현장 적용에 따른 생산성 및 실행력 제고

상향식 접근 방식(Bottom Up)의 스마트건설기술 정책 개념도



❧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전체 공사 내 공종별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의 실행력 제고

※ 2024. 10. 02. 정부는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숙련기능인력 도입 기반 조성 발표

-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사유 구체화
- 내국인들이 기피하여 인력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 신설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외국인력의 적재적소 활용을 통한 일정한 인력수급 문제 해결 및 공사비 안정화의 효과 기대

- 건설기능인력은 2025년 기준 총 182만 4,7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164만 5,943명(내국: 146만 6,091명, 합법 외국: 17만 9,852명)에 그쳐 약 17만 8,757명 부족 예상
-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는 약 27% 상승하였으며, 노무비지수 역시 약 22%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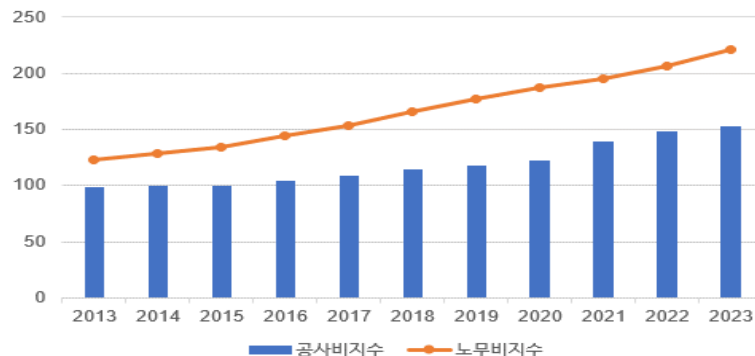
건설근로자 수급전망

연도	인력수요(A)	인력공급			수급차이	
		계 (B=B1+B2)	내국인(B1)	외국인(B2)	내국인 수급차이 (B1-A)	전체 수급차이(B-A)
2024	1,835,734	1,892,785	1,471,538	422,765	-364,196	58,569
2025	1,824,700	1,887,337	1,466,091	422,765	-358,609	64,156

주: 1) 수급차이에서 음수(-)는 인력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
2) 외국인 공급은 2024년과 2025년에 동일하다고 가정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2025년 건설근로자 수급전망”, 2024

건설공사비 및 노무비 지수 추이



자료: 공사비정보광장(www.g2b.go.kr)

※ 비숙련 외국인력 활용의 경우 건설업 쿼터 확대, 이동요건 완화 등 일정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

- 비숙련 외국인력: 공사가 일시적 중단된 경우에는 현장 간 이동은 할 수 있으나, 기존현장 복귀 불가
- 예시) A현장 → B현장 → C현장 → D현장 : 가능, A현장 → B현장 → A현장 : 불가능

비숙련 외국인력 관련 제도개선 사항

- 외국인 고용제한 전면 해제('23. 1. 1.)
- 외국인 건설업 쿼터 확대
 - 비전문취업(E-9) 확대 및 방문취업(H-2) 건설업 쿼터 폐지
- 현장간 외국인력 이동요건 완화
 - (기존) 공사현장 종료 또는 특정 공정기간 만료된 경우에만 이동 (개선) 일시적 공사 중단의 경우도 이동 허용

구분	인원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E-9)	143,530[123,530 + α(20,000)]	77,440 + α	5,000 + α	5,440 + α	12,970 + α	14,030 + α	8,650 + α
재입국 취업자	21,470	17,560	0	560	30	1,970	1,350
총계	165,000[145,000 + α(20,000)]	95,000 + α	5,000 + α	6,000 + α	13,000 + α	16,000 + α	10,000 + α

※ 숙련 외국인력 도입의 경우 시급함을 요하나,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다루어져 정책시차가 큰 상황

- 숙련기능인력의 경우 일반기능인력은 제외되어 있으며, 최근 전문건설협회 주도로 최초의 외국인 전문인력 (E-7-1) 비자 발급 사례

❖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인력수급 문제 해결 및 공사비 안정화를 위하여 고용허가제 관련 실효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

비숙련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주요 내용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당해 사업주에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 - 고용허가제 선장국 17개국 *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1회 체류 기간	• 3년
근무처의 변경·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처 변경(이동)의 제한 - 비전문취업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취업하여야 함 -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휴·폐업 등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 신청 가능 • 변경 횟수의 제한 - 비전문취업자의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 이내의 취업가능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절차에 따라 체류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휴·폐업,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건설업종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특례 - '동일 원청 현장 내 업체 간 외국인력 이동'의 경우 고용허가를 받은 업체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 책임건설업체(원도급업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근무처 변경 허가 -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동일 현장 내 업체간 인력 이동에 대해서도 공사현장 총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인력 배정의 자율성 부여

숙련 외국인력 제도개선 대상

신 약호	분류기준	참고
E-7-1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10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10개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8.1.신설(3개 직종) -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 비숙련인력의 경우 사업주 필요시 동일 사업주 내 현장 간 이동사유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관련 행정처리 절차의 간소화 필요

※ 일반기능인력(E-7-3)의 직종 범위에 건설기능인력을 추가하여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도입 기반 마련 필요

※ 숙련기능인력: 고용기업 추천 제도 개선 등 건설업 특성에 맞는 자격 요건 개정 필요

일반기능인력 제도 개선 사항

- ① 동물사육사(61395)
- ② 양식기술사(6301)
- ③ 할랄 도축원(7103)
- ④ 악기제조 및 조율사(7303)
- ⑤ 조선 용접공(7430)
- ⑥ 선박 전기원(76212)
- ⑦ 선박 도장공(78369)
- ⑧ 항공기 정비원(7521)
- ⑨ 항공기(부품) 제조원(S8417)
- ⑩ 송전 전기원(76231)
- ⑪ **건설기능인력 <신 설>**

숙련기능인력 제도 개선 사항

-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산 근로 중인 자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간 E-7-4 고용 계약
- 현재 1년 이상 근무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상시 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한시적 유예 신설>
-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저 200점 이상자
 - 최근 2년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 가운데 하나의 요건 충족
 - 한국어 이외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26. 12. 31)

계약제도(단가 산출 내역): 정책 내용

※ 2024. 07. 18. 정부는 계약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단가 산출내역 공개 발표

-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기업부담 완화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
- 2024. 09. 13.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개정(2025. 01. 01.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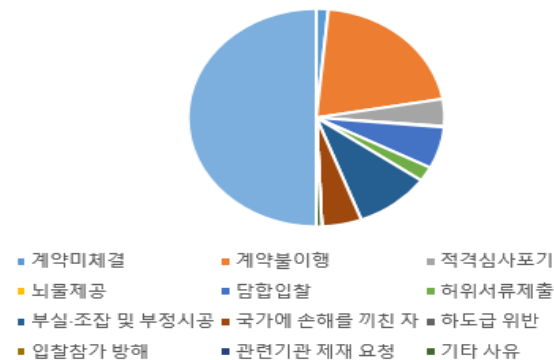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개정 사항

현행	개정안
〈신 설〉	<p>제4조의3(단가산출서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가 기재된 단가산출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 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는 단가산출서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정가격 4억 원 이하 종합건설공사 2.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3. 추정가격 1.6억 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 총래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총액입찰’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 산정에 대한 산출내역 미공개
- 예정가격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 기초금액에 대하여 저가·과소설계가 이루어지면서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으로 작용
- 현행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서는 기초금액 등 공사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대상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설령 가능하더라도 기초금액 산정 근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사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불가능
- 이의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가 설계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낙찰자 결정 이후 재산권 침해 또는 계약 포기 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피해 발생

'23년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

금액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계약: 추정가격 1억 원 - 그 밖의 공사계약: 추정가격 8천만원 • 물품 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 용역 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대상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입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 입찰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 •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정부조달협정 위배된 사항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사항 •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 • 지연배상금 •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



계약제도(단가 산출 내역): 정책 한계

❧ 정부의 계약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발주기관의 단가 산출내역 공개는 다음과 같은 한계 노출

- 단가산출서 공개와 관련하여 기초금액·예정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
- 개정된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에서는 추정가격 4억 원 이하 종합건설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단가산출서 공개 의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면서 이의신청 금액 요건과 부정합성 문제 야기

이의신청 대상과 단가산출서 공개 예외의 부정합성

- 이의신청 대상
 - 종합공사: 10억 원 이상
 - 전문공사: 1억 원 이상



- 단가산출서 공개 예외
 - 종합공사: 4억 원 이하
 - 전문공사: 2억 원 이하

구분	(법적) 이의신청 불가	(현실적) 이의신청 불가
종합공사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추정가격 1~2억 원 미만

- 개정된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의 단가산출서 공개에 관한 사항을 이의신청 대상으로 하더라도 일련의 계약준비 단계를 거쳐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이의신청에 따라 재입찰할 가능성은 어렵다고 판단

계약제도(단가 산출 내역): 정책 대안

- ❧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서 기초금액·예정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지방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 ❧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에서 단가산출서 공개에 대한 예외를 이의신청제도 예외와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단가산출서 공개와 이의신청과의 체계정합성을 확보할 필요
 - 단가산출서 공개 및 이의신청의 예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4억 원 이하, 전문공사의 경우 1억 원 이하
- ❧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도입하여 사전공개 단계에서 발주기관이 단가 산출내역을 공개하고 이의제기 시 내용 검토 및 재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이의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

이의신청 대상과 단가산출서 공개 예외 관련 입법 개선 방향



01 공정성·투명성 제고

- 이의신청 대상에 ‘단가산출서 공개’ 관련 기초금액·예정가격의 적정성 포함



02 체계정합성 확보

- 단가산출서 공개에 대한 예외와 이의신청 금액 요건의 예외를 체계적으로 규정



03 이의신청 실효성 강화

- 구매규격 사전공개 도입 및 이의신청 절차 진행

❧ 2024. 09. 06. 정부는 스마트건설 분야를 선도할 20개 기업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으로 선정

- '23년 20개 강소기업 선정을 시작으로 '27년까지 매년 20개씩 5년 동안 총 100개의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지원 사항

구분	지원사항	지원내용
①역량 강화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건설 혁신기업 지원사업 적용 스마트건설 지원센터에서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기업당 약 3천만원 상당)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1 전문가 컨설팅 투자전문기관과 협약을 통해 ①기업 진단 및 ②투자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술관련 분야는 ③연관 출연연(건기연) 등의 연구자와 연계
	인큐베이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입주 스마트건설 지원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강소기업은 2년간 입주 지원
②금융 지원	혁신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펀드 민간운용사 대상 투자설명회 참여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 혁신펀드, 민간운용사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시 참여 기회 제공
	보증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 수수료 할인(10%) 건설공사계약단계에서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이 필요한 계약·공사 이행에 대해 수수료 할인
③시장 진입	기업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강소기업 정보공시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기업정보 중 국토교통부 선정 강소기업 여부를 기재
	수요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연계 지원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를 활용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상생협력프로그램 차원에서 현장실증(PoC) 및 기술연계 지원 추진 및 가점 부여
	해외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부여 해외건설 지원사업(수주활동비 최대 1억원, 프로젝트 조사분석 최대 3억원 지원) 신청시 가점부여
④집중육성	집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기부 주관 예비유니콘 기업 응모 대상 선정 및 지원 투자전문기관을 활용한 투자신청서 작성 지원, 기술·사업모델 컨설팅 등

❧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으로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선정 및 스마트건설 산업의 생태계 구축 등 선순환 구조의 효과 기대

※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이전에도 유사한 중소기업 육성·지원 정책이 존재하였으나, 지속성과 중소기업의 참여 저조 등 일정한 한계 노출

- 중소·중견 건설기업(2015년) → 혁신 선도기업 중소기업 →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등의 명칭으로 변경

'20년 건설혁신 선도기업 인증



'20년 건설혁신 선도기업 인증 지원 내용

분야		지원 내용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입주지원('21년 말) • '수요기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우대 • 기업진단·방향설정 컨설팅 • 종사자 교육 • 보증부담 완화 및 저리자금 대출(공제조합)
시장진출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협력평가 가점(3점) • 고용평가 가점(0.5점) • 인증제(KISCON 기업정보 공개) • 기업진단·방향설정 컨설팅 • 종사자 교육 • 보증부담 완화 및 저리자금 대출(공제조합)
	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사업성 분석(KIND) • 시장개척 지원(해외건설협회) • 컨설팅(해외건설협회·로펌) • 기업진단·방향설정 컨설팅 • 종사자 교육 • 보증부담 완화 및 저리자금 대출(공제조합)

※ 기술부문 지원 외 공사 수주 및 금융 부문 등 중소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제도적 지원 사항은 미흡한 상황

- 공사 수주 지원은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입·낙찰 제도의 공정성·투명성으로 인한 지원의 한계
-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부의 금융지원(정책자금)의 경우 중소기업은 대부분 제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구분	지원목적	규모
혁신창업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 지원 특허 개발 기술 등 기술사업화 지원 	24,658억원
신시장진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기업의 수출촉진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4,674억원
신성장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지원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지원 친환경·저탄소 기업 지원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17,550억원
재도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창업 기업인에 대한 재계지원 부실징후기업의 선제적 지원 업종전환 및 FTA 무역피해기업 지원 	5,718억원
긴급경영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 피해기업의 복구비용 지원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2,300억원
벨류체인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 생산자금 공급 매출채권 조기 유동화 	1,675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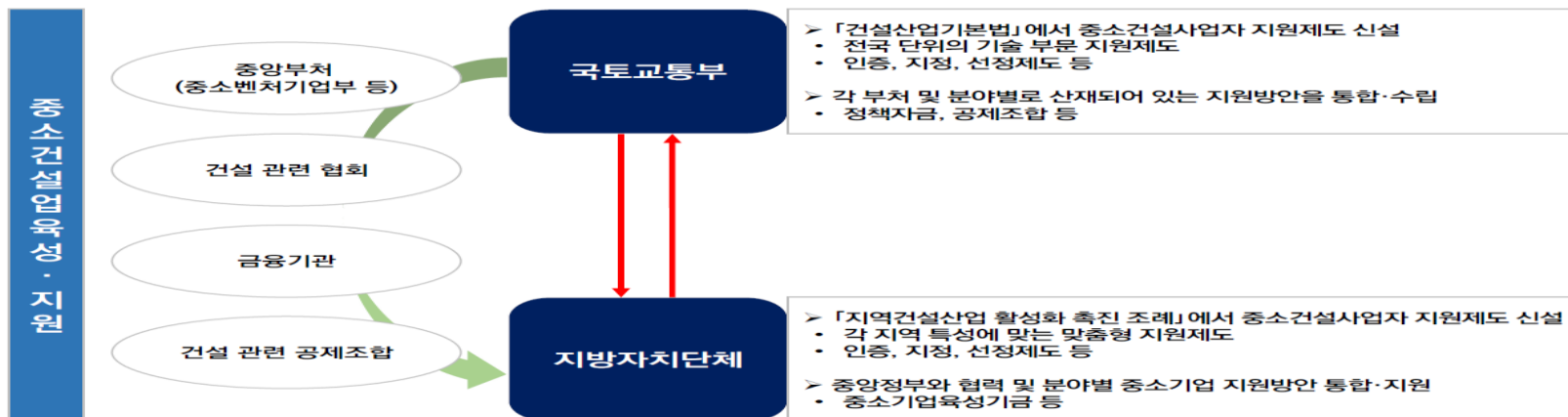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10)	융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41~42	•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 담배 중개업
	46~47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859 中	•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 다단계 방문판매
〈이하 생략〉		

중소건설업 육성·지원: 정책 대안

- » 전국 단위의 기술 부문 지원제도의 경우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필요
- » 중앙정부는 각 부처 및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는 지원방안을 통합·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등을 통하여 각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제도로 보완
 - 예를 들어, 충청남도의 ‘신뢰기업 선정 제도’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금융지원(정책자금) 등을 병합·지원하는 경우 중소기업 육성·지원의 지속성 담보 가능
 - 충청남도 신뢰기업 선정 제도는 대형 종합 건설업체와 도내 지역건설업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대형 종합 건설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 지원

중소건설업 육성·지원 방안





건설산업 육성·진흥
정책의 현황 및 과제

4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건설 정책은 건설기업의 수익성 지표 악화, 건설업 폐업 및 한계기업 증가 추세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긍정적 시그널(signal)로서 높이 평가
- ❧ 다만, 건설경기 심리가 꺾인 상황 특히, 정책·사회·경제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건설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다소 미흡한 상황
- ❧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스마트건설기술, 외국인근로자, 계약제도(단가 산출 내역), 중소건설업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이 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발주자의 책무를 부여하여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의 직불합의시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화 필요
 - 스마트건설기술: 중간단계의 스마트건설기술(bridge technique)정책을 수립하여 정책 목표와 건설 현장간의 괴리 해소 및 스마트기술의 개발·보급·확산 필요
 - 외국인근로자: 인력수급 문제 해결 및 공사비 안정 차원에서 비숙련인력의 경우 현장 간 이동 규제 완화, 일반 기능인력(E-7-3)의 경우 직종 범위에 건설기능인력 추가, 건설업 특성에 맞는 자격 요건 개정 필요
 - 계약제도(단가 산출 내역): 계약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비 관련 이의신청 명확화, 단가산출서 공개와 이의신청과의 체계정합성 확보, 구매규격 사전공개 도입을 통한 이의신청 실효성 확보
 - 중소건설업 육성·지원: 중소건설업 육성·지원의 지속성을 위하여 인증 정책의 법제화, 중앙정부의 금융부문 지원 방안 통합·수립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각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제도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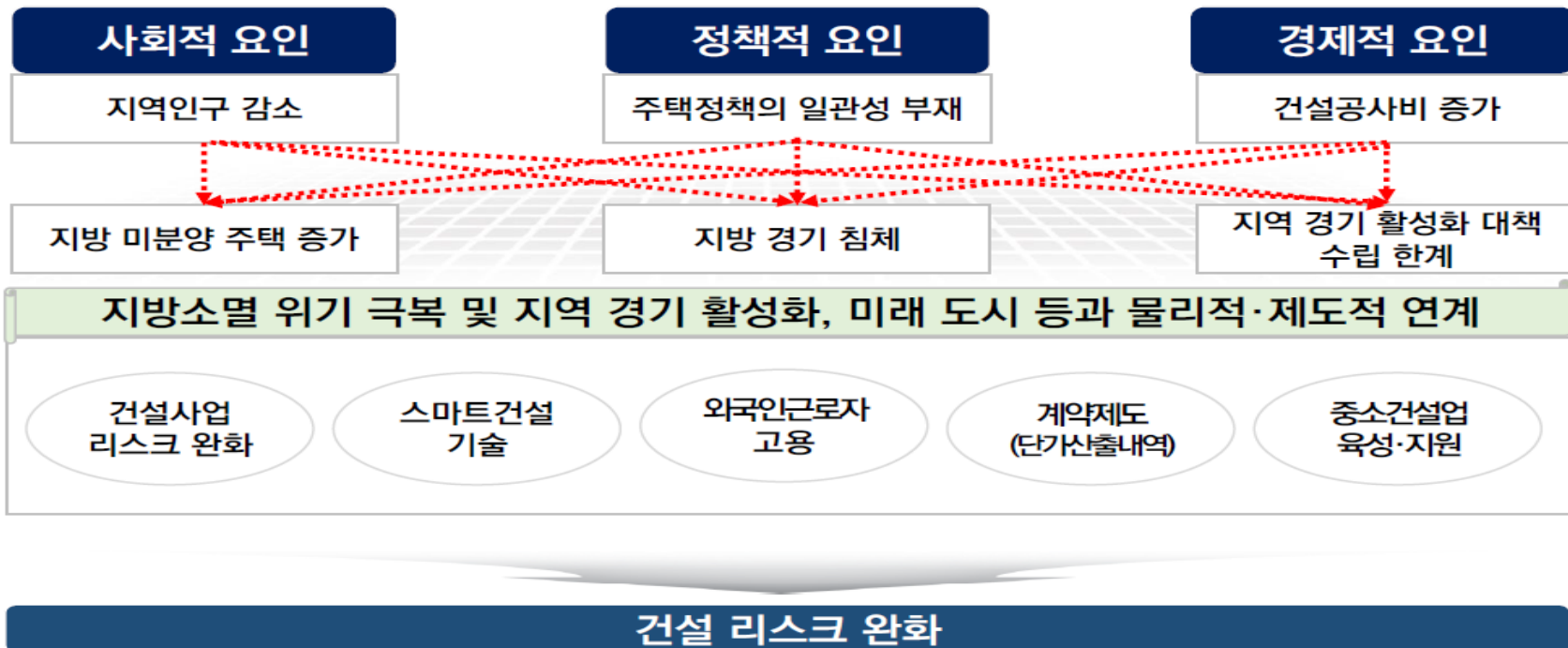
4. 시사점 및 정책 제언

건설산업 육성·진흥 정책 대안의 적용 방향

≫ 건설산업 육성·진흥 정책 대안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단위적 방법론에 불과하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 경기 활성화, 미래 도시 등의 미래 지향적 정책을 동력으로 삼아 추진할 필요

- 새로운 정책 발굴보다는 기존 정책과 연계하여 수정·보완하는 대응 방향
- 예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주택공급, 도시기능 강화, 미래도시 전환 등을 위해 다양한 혜택 및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률(2024. 04. 27. 시행)

건설산업 육성·진흥 정책 대안의 적용 방향





감사합니다